



인공태양 타지역 선정에 도 “절차 하자”

“공고문서 제시한 핵심 기준 충족한 지역이 새만금… 결과 뒤바뀐 건 납득불가”… 도, 이의신청 절차 착수

전북특별자치도가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해융합 핵심기술 개발 및 첨단 인프라 구축 부지 공모’에서 최종 탈락하자 즉각 반발하며 이의신청 절차에 착수했다.

전북자치도는 “공고문이 제시한 핵심 기준을 충족한 유일한 지역이 새만금이었음에도 결과가 뒤바뀐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즉시 이의신청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번 공모의 가장 중요한 요건은 연구기관이 부지를 직접 소유할 수 있어야 한다는 ‘소유권 이전 가능 여부’였다. 현행 법령상 지자체가 소유 토지를 국가 연구기관에 무상 양여할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최대한 ‘20년 무상임대+20년 경선’ 수준의 조건만 제시할 수 있다.

그러나 새만금은 새만금 특별법에 의해 ‘50년 임대+50년 경선’이 이미 가능하며, 전북도와 군산시는 여기에 더해 연구기관이 직접 부지를 매입하도록 출연금을 제공하는 방식까지 제안했다. 이는 공모 조건이 요구한 ‘즉시 소유권 이전’에 부합하는 사실상 유일한 방안이었다.

반면 일부 경쟁지역은 특별법 제정을 통한 미래의 무상양여 가능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전북도는 “법을 제정은 지방정부가 실행할 수 없는 영역이며, 현실적·법적 기반이 이미 완비된 새만금을 제쳐두고 가상의 가능성을 우선시한 것은 공모 취지를 벗어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사업 추진 속도 측면에서도 새만금의 우위는 분명하다는 게 도의 판단이다. 새만금 산업단지는 농어촌공사가



신원식 전북특별자치도 미래첨단산업국장이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해융합 핵심기술 개발 및 첨단 인프라 구축 부지 공모’에서 최종 탈락한 것과 관련 브리핑을 열고 있다.

단일 소유하고 있어 부지를 신속히 확보할 수 있는 반면, 경쟁 지역은 다수의 개인 토지 소유자가 존재해 매입 및 보상 절차 과정에서 일정 지연이 불가피하다. 2027년 착공이 예정된 국가 대형 프로젝트의 특성상, 토지 확보 속도가 핵심이라는 점에서 새만금이 최적지였다는 분석이다.

도는 이번 결과가 단순한 점수 차가 아니라 공모문이 제시한 ‘우선 검토 기준’이 실제 평가에서 제대로 반영됐는지 핵심이라고 강조한다. 특히 전북도와 군산시가 2009년 국가해융합연구소와 체결한 MOU를 비롯해 16년간

정부 계획에 따라 연구 기반을 단계적으로 조성해 온 만큼, 이번 결정이 행정기본법이 규정한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주장했다.

신원식 미래첨단산업국장은 “새만금은 법적·제도적·행정적으로 부지 제공 준비를 완비한 유일한 지역이었다”며 “우선권을 충족한 지역이 왜 탈락했는지 그 절차를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북은 도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정당한 결과를 얻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절차를 성실히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도는 공모의 핵심 기준인 소유권 이

전 가능성, 부지의 실질적 준비 정도, 법적·행정적 타당성, 사업 일정 준수 가능성 등 모든 항목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계획이다.

신원식 전북자치도 미래첨단산업국장은 “공모 우선조건인 토지 소유권이전이 가능한 만큼 새만금이 이번 공모 사업의 우선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탈락한 것은 부당하다”라며 “이러한 결정은 16년간 정부와 쌓아온 신뢰를 저버린 처사다. 행정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훼손한 이같은 선정 결과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꼬집었다.

/이만호 기자

UAE 전용운수권 주 4회 획득

김윤덕 국토부장관, 국제무대에서 큰 활약상

국제미민간항공기구 이사국 9회 연속 선출도

전북 출신인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이 국제민간항공기구 아랍에미리트 주 4회 지방공항공 전용 운수권을 획득하는 가운데 국제미민간항공기구 이사국 9회 연속 선출되는 등 국제무대에서 큰 활약상을 보이고 있다.



24일 국토교통부와 외교부에 따르면 도미니카공화국에서 열린 ICAN(국제민간항공기구 항공운송 협상회의) 2025에서 아랍에미리트(UAE)와 지방공항공 전용 운수권(한국 지방공항공-아랍에미리트 모든 공항) 주 4회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도미니카공화국, 아랍에미리트, 아이슬란드 등 총 13개국과 양자 항공회담을 열고 UAE와 지방공항공을 잇는 항공기 운행을 신설하기로 이 같이 설명했다.

UAE는 중동 지역에서 우리나라와 건설, 에너지인프라 등 경제 분야에서 활발히 협력 중인 국가이다. 특히 우리 국민이 유럽, 아프리카 등 장거리 이동 과정에서 관광 목적으로도 방문하는 국가로, 그간 한국-UAE 노선의 운수권은 주 2회로 양국 항공사가 인천발 2개 노선(두바이, 아부다비)만 운항하고 있었으나, 이번 합의에 따라 향후 지방에서도 바로 중동으로 가는 노선이 신설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 국토부는 도미니카공화국과 항공협정을 체결하기로 했다. 다만 양국은 국내 절차를 거쳐 협정 문안에 서명하기로 했다.

이는 우리나라가 중남미 국가와 체결한 10번째 항공협정이 될 예정이다. 우리나라와 직항편이 없었던 중남미 국가들과도 향후 항공 협력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김 장관은 대한민국 수석대표로 참석한 가운데 지난날 캐나다에서 열린 국제민간항공기구 이사국 9회 연속 이사국에 선출되는 영광을 안았다.

이번 9회 연속 이사국 선출은 대한민국이 국제 항공 규범을 주도하는 주요 기구에서 장기적 임지를 확보하는 한편 항공 외교력을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권희성 기자

“전북·강원특별법 제정, 정기국회 내 통과돼야”

도, 강원과 협력 여야 원내대표 공동 서한문 전달

도, 올해 마지막까지 전북 중점사업 국비 확보 위해 전력

전북특별자치도는 김중훈 경제부지사가 24일 기획재정부 제2차관, 사회예산심의관 등 기재부 예산 핵심 라인과 서울에서 탈레이 면담을 갖는 등 2026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막판 총력전에 나섰다

【관원사 3면】

이번 일정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 감액심사가 마무리되고 증액 심사가 본격화되는 시점에 맞춰

김중훈 경제부지사, 국회 증액 심사 전 기재부 찾아 설득 나서

경제부지사가 실질적인 예산 증액 검토를 담당하는 기재부 예산 책임자들을 직접 만나 예산 반영 폭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김중훈 경제부지사는 이날 기재부 제2차관을 만난 자리에서 △새만금 상수도 간선관로 △전북북권역 통합재활병원 △가평향 국가어항 개발 △방사

선 기반 소재 장비 기술 혁신화(R&D) △사료작물 종자 생산단지 구축 등 전북 핵심사업의 필요성과 국가정책 연계성을 근거로 예산 반영을 요구했다. 이어 사회예산심의관실 국·과장을 찾아 △국립모두예술문화플랫폼 △국립후백제역사문화센터 △덕유산 국립공원 생태탐방원 △국립중앙도서관 문

화예술특화 분관 △부안군 탄소중립 체험관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조성 사업 2·2단계 △AI 융합 영화·영상 실증센터 건립 등 생활·문화·환경 분야의 주요 사업 추진 필요성을 설명하고 기재부의 협조를 요청했다.

김중훈 경제부지사는 “이번주 국회의 증액심사는 26년 국가예산 편성의 마무리 단계”라며 “기재부와 국회를 상대로 전북 핵심사업의 필요성과 증요성을 명확히 제시해 마지막까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와 강원특별자치도가 손잡고 여야 원내대표에게 특별법 개정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김관영 전북지사와 김진태 강원지사는 24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각각 공동 서한문을 전달했다. 양 지사는 이 자리에서 전북·강원특별법 개정안의 정기국회 처리를 요청했다.

전북·강원특별법 개정안은 지난해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됐지만, 올해 11월까지 법안심사소위에서 한 차례도 다뤄지지 않았다. 1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인 셈으로, 이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실망과 좌절감이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양 지사는 서한문에서 “두 지역은 여야 협치로 특별자치도를 출범했다”라며 “제도적 기반 강화를 위한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원은 2023년, 전북은 2024년 각각 특별자치도로 전환했다.

개정안은 정부 부처와 협의를 마친 상태다. 무쟁점 법안이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두 지사는 “행정안전위원회가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심사를 마무리하고,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의
대한민국의
미래
새만금